

2005 장애인인권상담 정신지체장애인 상담 및 법률상담 증가

| 자료/사진제공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5월 1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연구소에 접수된 469건의 상담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와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번 상담사례 소개와 분석은 2005년 한 해 동안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등 총 469건을 취합해 분류한 것이다.

정신지체가 20.7%, 지체장애가 15.8% 등

인권상담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유형이 파악된 51.4%의 상담내용 중 정신지체가 20.7%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가 15.8%, 뇌병변·시각장애가 각각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과 비교했을 때 지체장애 상담건수는 0.9% 증가한 것에 비해 정신지체 상담 건수는 10.7%나 증가한 것으로 연구소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 사안을 전개해 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상담유형별로는 노동권과 소비자권, 재산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요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사례는 주로 △입사시험에서의 차별,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

체불, △보호를 빙자한 노예노동과 수급권 착취 및 착복 등이 많았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상담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많았으며 생존권 관련한 상담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과 관련한 상담이, 소비자권리 관련 상담은 보험, 금융권 차별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이용거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핸드폰 요금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보험차별의 경우, 기존의 가입거부의 문제를 넘어 보상상의 차별을 언급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병찬 인권상담 활동가는 2005년 인권상담 사례분석의 주요한 흐름으로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상담 증가 △각종 법률상담 증가를 꼽았다. 조병찬 활동가는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상담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시설장애인의 문제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의 문제 △성년후견인 제도화 활동 등 연구소의 정신지체장애

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들이 지속되었다”며 “누적되어온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

“ 상담접수와 대응 과정상의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인권교육은 단순하게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해 시 위기지원센터 마련을 위한 활동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 법률상담이 크게 증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폭력, 착취, 감금, 성폭력 등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시설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장애인들 스스로가 풀어가는 것은 매우 힘들며 여타의 장애인 단체들도 법률상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연구소는 향후 법률위원회와 법률상담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인력확충과 재정 마련에 중점을 두어 활동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적 지원 병행 요구

인권상담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과제의 핵심은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상담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체계 마련, 학대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지원센터 마련, 합법적 대응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과제는 물론 상담접수와 대응 과정상의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인권교육은 단순하게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05 인권상담 분석결과 발표에 이어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중 △수사절차상에 나타난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 △공무원 임용시험상 장애인차별과 대응과정,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으로써의 소송과정 등의 주제를 가지고 당사자, 장애인부모, 담당변호사가 함께 발표하는 시간도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장애인 당사자인 이정민씨는 지난해 행정고등고시, 사법고등고시,

변리사시험 세 분야 국가 시험제도를 통해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상 장애인차별 개선과정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정민씨는 “공무원의 역할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활동보조인을 두거나, 청각 시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2005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규모가 92만을 넘어가고, 사회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채용 거부하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험 시행 과정뿐만 아니라, 합격 후 교육과정에서의 지원과, 직무 배치 과정에서도 장애에 맞는 합리적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표> 상담유형별 상담건수

상담유형	상담건수	비율(%)
노동권	48	10.2
여성장애인권리	26	5.5
생존권	20	4.3
건강권	1	0.1
교육권	24	5.1
문화향유권	4	0.1
접근권	11	2.5
지원서비스	22	4.9
소비자권리	48	10.2
형사상권리	22	4.9
시설장애인권리	25	5.3
가족권	16	3.4
신체자유권리	30	6.4
재산권	39	8.3
정보제공	75	16.5
정책건의	1	0.1
정서적지지	30	6.4
기타	27	5.8
합계	469	100

2003~2005 상담유형 TOP3

[2003] (정보제공 41.4%)

- 1. 소비자의 권리 8.4%
- 2. 재산권 6.6%
- 3. 노동권 6.5%
- * 신체자유 의 권리 4.1%

[2004] (정보제공 29.3%)

- 1. 소비자의 권리 8.1%
- 2. 노동권 5.9%
- 3. 신체자유 의 권리 5.4%
- * 재산권 4.1%

[2005] (정보제공 16.5%)

- 1. 소비자의 권리 10.2%
- 2. 노동권 10.2%
- 3. 재산권 8.3%
- * 신체자유 의 권리 6.4%